

## 비교를 위한, “비교”의 거부:

세월호 사건과 “막말”의 메커니즘

박 형 진

(University of Chicago 인류학과 박사과정)

나는 1994년 2월 고향 대구를 떠나 가족과 함께 서울로 이사 왔다. 그리고 내가 서울로 온 지 1년 후인 1995년 봄, 내가 살던 대구 상인동의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가스 폭발로 10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의 희생자들은 대부분 인근 학교의 학생이었다. 동네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중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형’들이 사고의 희생자라며 뉴스에 나왔다. 나의 어머니는 우리 동네를 지나던 버스가 전복된 장면을 보고는 할 말을 잃으셨다.

사고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그 해 6월, 서울 시내 중심의 한 백화점이 속절없이 무너졌다. 어느 서울의 가정집이 그러했듯, 우리 집에도 지방에 사는 친척과 지인들의 전화가 이어졌다. 삼풍백화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는 나의 큰 이모는 백화점이 무너지기 불과 10분 전 건물을 빠져나오셨다고 한다. 그 해 여름 내내 뉴스의 카메라는 무너진 백화점과, 그 곳에서 20일을 넘게 버티고 살아남아 구조된 ‘위대한 생존자’를 비추고만 있었다.

가스폭발 사고의 희생자일 뻔 했으며 삼풍백화점 붕괴로 이모를 잃을 뻔 했던 나는, 별일 없다는 듯,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대학에 입학하였다. 그리고 때는 2003년 2월이었다. 대구에서 올라와 반갑게 인사를 한 새내기 후배가 대구지하철 화재 사건으로 숨졌다는 소식을, 친구들과 거나하게 술을 먹고 숙취로 어지러워하며 뒤척이던 신문에서 접했다. 나와 친구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대구로 향했고, 몇 날 몇 일을 검은 재로 가득한 지하철 역사에 모인 유가족들을 도우며 보냈다. 내가 무엇을 도왔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내 손을 붙잡고 실종된 아들이 나와 닮았다며 한참을 놔주지 않으시던 한 아주머니의 얼굴만은 잊을 수가 없다.

90년대와 2000년대를 ‘수놓은’ 한국 사회의 대형 재난들은 비록 나의 삶과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을지언정, 내가 살아온 궤적과 묘한 반향을 그려내며 발생하였다. 사고의 피해자 혹은 유가족과 방관자 사이에는 우연으로 점철된 아주 얇고 희미한 구분선이 있을 뿐이다. 그마저도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사고의 논리적, 감정적, 사회적, 정치적 매듭이 지어지는 시점까지 이러한 구분은 압도적 비극 앞에 자취를 감춘다. 그러나 시간의 힘, 정확하게는 망각의 힘은 비극의 무게를 오롯이 당사자에게 전가하고, 그 무게로부터 해방된 나머지 사람들은 비극의 절대적 무게를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 즉 “계량 가능한” 무언가로 인지하게 된다. 즉, 재난이 일

진적으로 형성하는 절대적 공동체는 계량불가능한 슬픔을 짊어진 ‘저들’과 그것을 무언가로 환원하여 다른 것과 비교하고자 하는 ‘우리’ 사이의 구분으로 다시 귀결된다.

이 글에서 나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후 일련의 논쟁을 추적함으로써, 절대적 슬픔의 공동체로서 기능하였던 한국사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슬픔을 떠안은 자’와 ‘슬픔을 냉정히 사유하는 자’로 구분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세월호 사건은 사고의 처리는 물론 이와 관련된 정치적 논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세월호 사건은, 다른 많은 대형사고 및 재난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것이 초래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대면하지 못한 채, 또 희생자와 유가족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품지 못하는 방식으로 잊혀지고 있다. 허나 다른 한편으로 세월호 사건은 사회적, 계급적, 지역적 동질성을 가진 유가족 집단이 다양한 방식과 전략으로 망각에 저항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사건을 잊혀지게 하는 시간의 힘, 그리고 구분의 메커니즘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세월호 사건은 후기산업사회 한국이 경험한 대형재난 중 ‘하나’이자, 그 재난들과 비교할 수 없는 독특성을 지닌 ‘특별한’ 사례/사고이기도 하다.

또한 이 글은 세월호 사건을 간접적으로만 경험한 인류학자의 위치에 대한 성찰이기도 하다: 인류학자는 슬픔을 떠안은 자와 함께하는가, 아니면 그 역시 나름의 방식으로 슬픔을 냉정히 사유하는 자에 불과한가. 그가 서 있는 위치는 시간과 망각의 힘이 만들어낸 구분에서 자신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러한 구분을 성찰하고 나아가 극복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 글은, 세월호와 관련된 논쟁을 설명하고 분석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인류학자의 위치를 성찰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 전선들: 계산, 계량, 비교

세월호 사건은 어디서 시작했으며, 언제 끝났는가? 사건의 시작점을 찾으려는 시도는, 세월호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사고 발생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만들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사건의 종결점을 탐색하려는 시도는 사고로 인한 충격과 슬픔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들을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 나는 세월호 사건—진도 앞바다에서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하여 승객 다수가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즉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구조적으로 형성되고 있었던 원인에 대한 부분은 다루지 않을 것이다. 대신 이 글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당일부터 짙어온 ‘슬퍼하는 자와 사유하는 자’의 구분의 역사<sup>1)</sup>를 다시 정리해보고자 한다.

---

1) 이 글에서 다루는 ‘역사’는 세월호 사건 이후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기록의 수집은 더 체계적인 방식으로, 더 역량 있는 집단에 의해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움직임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그 역사의 단편들을 굳이 꺼내어 자세히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전제하는 것들이 언젠가는 잊혀지거나 희미해질 것이기 때문이고, 사실 서술이 없는 분석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읽혔을 때, 혹은 한국사회의 이 기괴한 소용돌이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 의해 읽혔을 때, 생경하다 못해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 죽음의 가치를 계산하기

사고가 발생한 당일, MBC는 <특집 이브닝뉴스>에서 사고의 희생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sup>2)</sup> 이 뉴스 리포트는 사망보험금은 물론 상해치료비, 심지어는 휴대폰 분실에 따른 보상금까지 자세히 소개하였다. 이 소식은 보도되자마자 거센 항의에 직면하였다: 사망보험금을 소개한 MBC의 자료화면은 수온과 생존가능시간 사이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CNN 보도의 자료화면과 대비되었고, 이는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는 ‘선진’ 외신과 생명의 가치를 보험금으로 환원하는 ‘천박한’ 한국 언론의 대비로 재생산되어 유포되었다.

비록 MBC 보도가 여론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지만, 죽음의 가치를 계산하고 비교하는 시선이 그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 및 책임소재 파악,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 및 보상을 골자로 하는 4.16 특별법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억눌려 있던 보상의 문제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문제의 핵심은 단원고 학생에 대한 특례입학제도 시행과 세월호 사고 희생자를 의사자로 지정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배보상 방식은 특별법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에 의해 제안되고 일부 합의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의해 마치 유가족이 이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도되었다.<sup>3)</sup> 이와 같은 보도는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유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의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광화문에 있는 세월호 피해자 농성장에 나와 시위를 벌인 보수단체<sup>4)</sup>는 유가족들이 “지나친” 보상을 고집한다며 유가족을 적대시하기 시작했다. 특별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에 촉발된 보수단체의 시위는 그 과격성이 주로 부각되어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그들은 일관된 논리와 명료한 관점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웠다. 즉, 유가족의 슬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세월호 희생은 안타까우나”) 피해자 보상은 언제까지나 이성적인 잣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른 국가적 재난의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과 형평을 맞추어 (6.25 전쟁의 희생자나 천안함 희생자와 같은 ‘진정한’ 순국열사와 차등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자신들이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유가족들의 슬픔의 무게는 “지나친” 것이며, 그 지나침은 부, 명예, 및 기회의 공정한 배분은 물론 사회 전체의 발전을 방해하는 걸림돌로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논리적 근거였다.

## 사건의 무게를 계량하기

사건의 비극성과 거리를 둔 자신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해”와 “비교”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역으로 비극의 무게를 직접 짚어진 유가족들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자격을 갖지 못한다는 주장은 몇몇 과격보수단체 회원들만이 공유하는 것이 아니었다. 4.16 특별법에 대한 토론이 7월부터 시작되어 11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가장 치열한 논쟁점은 진상

2) “세월호 구조하고 있을때 보상금 따진 MBC에 분노”, 미디어오늘 2014-04-17.

3) “세월호 유가족, 막대한 보상금 받는다고?”, 한겨레 2014-07-15.

4) “단식 중인 세월호 유족 앞에서 보수단체 “나라 위해 목숨 바쳤나?””, 오마이뉴스 2014-07-18.

조사단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게 되는가, 그리고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데 있어 유가족의 의사 결정이 어디까지 보장되는가였다. 특히 유가족은 국회 차원의 세월호 국정조사가 파행 속에 성과 없이 마무리되고, 특검을 통한 조사 역시 성과를 낸 전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 진상조사위에 보다 강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고의 원인을 성역 없이 조사할 수 있기를 원했다. 이러한 유가족의 요구에 여당이 반발한 주된 이유는 사고의 진상조사위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전례가 없으며, 이와 같은 예외를 만드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는 것이었다<sup>5)</sup>. 여기에 더해 여당 및 여당측 입장의 지지자들은 유가족이 조사단 구성에 대해 추천권을 행사하는 안을 반대하면서, 이러한 조치가 마치 “피해자에게 범죄자를 잡으라고 칼을 쥐어주는 격”이라고 평가했다<sup>6)</sup>. 즉, 특별법 제정에 있어 유가족은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과 독특성을 강조하며 끊임없이 사건의 처리 및 조사과정의 감시자이자 참여자로 스스로의 위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반면, 이에 반대한 여당 및 여당지지 세력은 세월호 사건을 다른 수많은 사고들 중 ‘하나’로 놓으며 여러 사고 및 재난의 처리가 그러했듯 피해자를 수동적인 보상의 대상으로 한정짓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논쟁에 있어 중요한 지점은 세월호 사건의 특수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였다. 세월호 사건을 “전례가 없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규정하려는 유가족 및 지지자들과는 반대로, 여당 및 정부 지지자, 혹은 친정부적인 언론인들은 세월호 사건을 “과거에도 발생해왔으며 미래에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건 중” 하나로 위치시키고자 했다. 이와 같은 전제 하에서 세월호 사건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과거 유사한 사건에 대한 대처와도 형평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가 비슷한 수준의 대처를 해야하는 전례를 만든다는 점에서 허용될 수 없었다. 이러한 관점이 더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가 세월호를 교통사고에 비유한 KBS 국장의 발언<sup>7)</sup>, 사건에 대한 정부 책임의 한계를 논하며 조류독감을 예로 든 조원진 국회의원의 발언<sup>8)</sup>이었다. 그들은 세월호의 죽음들을 이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다른 죽음들 (심지어 닭의 죽음을 포함하여) 과 병렬시킴으로써, 세월호 사건에 대한 유례없는 관심과 전례없는 조사의 정당성을 약화하고자 했다.

### 다른 중요한 가치들과 비교하기

세월호 사고는 한국사회의 모든 삶의 리듬을 일시중지시켰다. 가수의 신보 발표, 예능 방송 프로그램, 각종 문화행사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되었으며<sup>9)</sup>, 외식업계가 타격을 입을 정도로<sup>10)</sup> 일상적인 외식과 음주 역시 애도와 추모의 분위기 속에 자제되었다. 입법부의 활동 역시 사실상 중단되었다. 법안 처리가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었으며 세월호에 대한 국정조사가 국회 주도로 이루어지긴 했으나, 행정부가 주도하는 소위 “경제활성화 법안” 및 반부패 “김영란법” 등 주요 법률안들의 통과가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논란 속에 무기한 연기되었다.<sup>11)</sup>

5) “세월호 특별법, ‘전례’ 없다? “우리는 전례없는 조치 원한다””, 미디어오늘 2014-7-26.

6) “[특집 토론] 세월호 특별법 어떻게 풀 것인가?”, JTBC 2014-07-23.

7) “KBS 국장 “세월호, 교통사고와 비교하면...””, 오마이뉴스 2014-05-04.

8) “조원진, 세월호 참사를 ‘조류 독감’ 비유”, 경향신문 2014-07-11.

9) “예능프로 결방...대중문화계도 세월호 참사 애도 분위기 동참”, 스포츠경향 2014-04-17.

10) “외식업계, 세월호 사건 이후 매출 급감”, 식품음료신문 2014-05-27.

대신 세월호는 빠르게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 휩쓸려갔다. 야당은 세월호 사고 50일째에 시행된 6월 4일 지방선거를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을 심판하는” 계기로 삼고자 했고<sup>12)</sup>, 여당은 세월호로 부각된 안전문제를 주요공약에 반영함으로써 야당이 세월호 이슈를 독점하지 못하게끔 견제했다.<sup>13)</sup> 선거를 둘러싼 많은 변수와 논제가 있었음에도, 선거의 결과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민심” 혹은 “민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특히 7월 30일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자, 여당 및 일부 언론은 이를 국민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피로감을 표로 피력한 것”으로 해석했다.<sup>14)</sup>

이와 같은 선거 성적표를 받아들자마자 여당은 세월호특별법 처리 문제에 대해 유가족과 상반된 태도를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시작했다. 유가족의 단식 농성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유가족이 요구하는 특별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내세웠다. 여야와 함께 특별법의 내용을 논의하길 원했던 유가족은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을 통해서만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협상의 구도는 여야합의가 두 차례에 걸쳐 유가족 반대에 의해 무산되는 진통을 초래했다.<sup>15)</sup> 야당은 유가족의 입장과 당의 입장, 그리고 협상 상대자인 여당의 입장 (그리고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청와대의 입장)을 모두 조율하여 타협안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으며, 그 결과는 “슬퍼하는 자”의 전형적, 그리고 수동적인 역할을 포기하고 “정치”의 전면에 나섰던 유가족이 원했던 바와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유가족들은 여야의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진 세월호 특별법이 세월호를 침몰시킨 한국사회의 수많은 “문제”들과 함께 놓여져 끊임없이 깎여가는 과정을 조용히 목도해야만 했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 선장이 회사에, 회사가 국정원에, 해경이 언딘에게, 언딘이 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사고를 키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법의 제정 과정에서도 야당은 여당에게, 여당은 야당과 청와대에게, 청와대는 다시 국회에게 책임을 돌리기에 급급했다. 그 결과 특별법의 통과는 사고 205일이 지난 후야 이루어졌으며,<sup>16)</sup> 더 많은 증거 및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는 그만큼 허비되었다. 또한, 세월호가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충분한 안전점검 없이 무리하게 많은 화물을 실고 운행하다 사고가 났던 것처럼, 세월호 특별법 역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월호에 발목 잡혀서는 안된다”는 여당 및 정부의 논리에 막혀, 국정감사 및 예산안 처리라는 일정에 쫓겨 불완전한 모양새로 통과될 수밖에 없었다.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논의는 물론, 사고의 사후 처리가 맞닥뜨린 가장 큰 현실은 바로 세월호 침몰에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인 “경제논리”였다. 사고 발생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5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은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세월호 사고 후 급격히 감소한 소비를 언급하였다. 오랜 경제침체 후 모처럼 회복세에 접어든 국가경제가 다시 주저앉는다면 그 타격이 먼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사회불안과 분열을 조장하는 움직임을 차단

11) “새누리당의 세월호특별법 재협상 불가 방침에 국회는 ‘올스톱’”, 민중의 소리 2014-08-13.

12) “세월호 심판 vs 지방정부 심판 … 표심은 앞치락뒤치락”, 중앙일보 2014-06-01.

13) “與野 지방선거 10대공약 발표…세월호대책 등”, 뉴시스 2014-05-11.

14) “7·30재보선 야권 참패했으니, ‘세월호 잇자’는 지상파 뉴스”, 미디어스 2014-08-01.

15) “세월호 특별법 제정, 그 뒷이야기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은 완고했다””, 오마이뉴스 2014-11-13.

16) “[속보]세월호특별법 등 ‘세월호3법’, 참사 205일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경향신문 2014-11-07.

해야 하고, 나아가 세월호 사고로 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탈규제화에 제동이 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회의 중 대통령 발언의 요지였다.<sup>17)</sup> 이 발언을 통해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로 겪는 유가족의 아픔을 전 국민—특히 “서민”—이 겪게 될 경제적 고통과 나란히 배치하고, 은연중에 후자의 문제가 전자에 비해 더 파급력이 크며 심각함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세월호 사건을 통해 제기되는 정치적 책임에 대한 논쟁 및 탈규제화에 대한 반발은 “더 중요하고 위급한” 경제문제에 비추어보았을 때 제한되거나 유보되어야 할 것으로 재해석되었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이 야당이나 유가족, 혹은 그들의 지지자에 의해 비민주적이고 몰상식적인 것으로 비난받은 반면,<sup>18)</sup> 여당 및 보수단체는 이와 같은 논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자신들의 논지를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앞서 소개한 보수단체의 세월호 “반대” 시위에는 “세월호 때문에 국민들 생업이 죽었고, 국가의 경제가 죽었다”라는 발언이 등장했다.<sup>19)</sup>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특별법이 처리되기 전까지 다른 법안을 처리할 것을 거부하자, 여당은 “민생경제 법안이 세월호 특별법에 볼모로 잡혀있다”며 세월호 특별법과 별개로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을 먼저, 그리고 별개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sup>20)</sup>

“경제”는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세월호 사건과 비교된 것이 아니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자, 여당 국회의원인 김재원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사위 사무처의 규모가 방송통신위원회보다 크다”면서 “이걸 만드려는 사람들은 세금 도둑”이라 발언하였다.<sup>21)</sup> 최근에는 세월호 인양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관련 부처 장관은 인양에 드는 비용을 언급하기 시작했고,<sup>22)</sup> 일부 국회의원 및 보수언론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이유로 인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하기도 했다.<sup>23)</sup> 세월호 사건의 상징적 의미, 실종자 수색, 진상 규명 등의 명분은 “비용”으로 환산되어 다른 기관, 다른 사업, 그리고 납세자의 부담과 비교된 것이다.

## (정치적) 결론: 비교를 위한, “비교”의 거부

앞에서도 설명했듯, 이 글은 세월호의 침몰 이후 일어난 ‘모든 일’을 다루고 있지 않다. 세월호 사건의 피해를 증폭시킨 언론의 오보 및 왜곡 보도, 침몰 이전과 이후에 걸쳐 일관되게 드러난 정부기관과 민간영역 사이의 문제적 연결, 유병언의 도주쇼로 인해 새롭게 부각된 종교, 자본과 정치의 기묘한 콜라주 등은 이 글이 다루지 않은 세월호 사건의 중요한 측면들이다. 또한, 세월호 침몰 삼일째 총리의 차를 막고 진도 다리를 건너 청와대로 행진하려 했던 유가족, 46일간 단식을 하며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요구했던 “유민아빠” 김영오, “가만히 있으라”는 팻말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던 용혜인과 다른 집회 참가자들, 그리고 합동분향소 앞에서 몇 시간

17) “긴급민생대책회의 중 대통령 말씀”, 청와대 국문 홈페이지 청와대 브리핑 2014-05-09.

18) “野 ‘세월호 유가족 호소가 사회분열야기 세력이나’”, 뉴스 1 2014-05-09.

19) “단식 중인 세월호 유족 앞에서 보수단체 ‘나라 위해 목숨 바쳤나?’”, 오마이뉴스 2014-07-18.

20) 김무성, “세월호法和 분리해 민생법안 처리해야”, 뉴시스 2014-08-21.

21) “세월호 진상위 ‘세금 도둑’ 김재원 새누리 원내수석부대표 발언 논란”, 경기일보 2015-01-16.

22) “[사설] 민감한 국정현안 결정을 여론조사에 떠넘기는 정부”, 서울경제 2015-04-06.

23) “세월호 인양 또 반대…김진태 ‘3불가론’ 제시”, CBC 뉴스 2015-04-07.

동안 줄을 서 참배를 했던 이름 없는 시민들의 이야기 역시 이 글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나는 대신 매우 불편하고 화가 나는, 세월호 사건을 잊고 싶어 하거나 그 의미를 축소하고 싶어 하는 진영의 이야기를 꺼냈다. 언론의 프레임을 빌어 표현하자면, 내가 정리한 역사는 “막말의 역사”에 가까울 것이다.

막말은 참 쉽게 소비된다: 쉽게 뺏어지며, 들은 사람을 쉽게 분노시키지만, 시간은 분노를 희석시키고 사과는 전선을 흐린다. 그리고 또 다른 막말에 의해 이전의 막말은 가리워진다. 그러나 이 글에서 보여주고자 했듯,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막말들은 한국사회가 작동하는—즉, 삼풍을 붕괴시키고 대구 지하철을 불태우고 세월호를 침몰시키며 또 다른 사고를 예비하는—중요한 메커니즘을 징후적으로 보여준다. 생명의 무게는 자본의 논리로 가벼워지고, 반성의 계기는 현실정치의 논리에 의해 잃어진다. 돈이 사람에 앞서 생긴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면밀히 검토하지는 목소리는, 다시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고자 하는 경제와 “민생”의 논리에 부딪혀 힘을 잃고 있다. 막말은 찰나이지만, 그 막말을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은 사건 이전에도, 사건 이후에도 한 번도 작동을 멈춘 적이 없다. 분명 “절대적 슬픔과 애도의 대상”이었던 세월호 사건은 이제 여러 정치적 의제 중 하나, 여러 비용 중 하나, 그리고 과거에도 간헐적으로 발생했으며 미래에도 발생할 여러 사고 중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세월호 사건은 이제 비교가능한, 통약가능한(commensurable) 단위로 점차 재정의되고 있다.

이 메커니즘을 무엇이라 부를 것인가? 통약가능성의 확보는 근대적 자본주의와 관료제를 가능케 하는 핵심기제이며, 근대 사회과학 역시 이 토대 위에서 발전하였다(Chakrabarty 2001; Tsing 2012).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를 ‘근대성’이라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법과 정치, 경제 영역이 유기적으로 자본의 자유로운 축적과 순환을 뒷받침하는 체제라는 의미로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할 것이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의 특수한 경험에 주목하는 이들은 ‘개발주의(developmentalism)’이란 단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이 용어들이 모두 각자의 근거에 의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이 용어들의 경합 속에서 한국사회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좀 더 풍부하게 사유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명명은 학술적인 가치는 지닐지언정, 비판적이고 실천적인 힘을 생산하지는 않는다.

대신, 초보적이고 파편적인 분석에 기대어 내가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정치적이고 비판적인 결론은, 바로 비교의 거부다. 이는 세월호 사건이 다른 한국사회의 대형재난과 가진 유사성을 부정하거나, 소위 ‘선진국’의 모범적인 사례를 본받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다. 그보다는, 세월호 사건이 드러내는 한국사회의 각종 구조적, 제도적, 정치적, 행정적, 문화적, 사회적, 기술적, 환경적 문제들을 역사적 선례와 동시대적 과제와 무관하게 독자적이고 고유한 것으로 다루고, 그것들을 기록하고 분석하고 해결하는 작업을 고유한 과제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동시대적 문제”보다” 세월호 사건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한 우선성의 주장 역시 비교의 프레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향후 더 심각하고 긴급한 문제가 등장했을 때 세월호의 기억은 “우선성”의 논리 아래 손쉽게 바스라질 것이다. 그보다는, 학자와 활동가, 정치인과 행정부, 법조계 등이 유가족과 긴밀한 협조 속에 사건의 의미와 원인을 논의하고 분석할 수 있는 틀이 현실정치와 경제논리, 그리고 가학적인 “막말”들로부터 분리

되어 “꾸준히” 그리고 “충분히”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24)</sup> 이는 누가 될지 모르는 또 다른 세월호 사건으로부터 한국 사회의 다른 구성원을 지키기 위해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오롯이 세월호 사건, 사건의 피해자 및 당사자에 대한 것으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충분한 분석과 탐구가 이루어졌을 때, 사건의 원인이 명백히 이해되고 대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사건의 피해자 및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과 배상, 그리고 책임 추궁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참고할 만한 “전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세월호 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고가 반복되었을 때, 그 때 우리는 그 사고와 세월호 사건을 “비교”하면서 더 나은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때, 즉, 세월호 사건이 온전한 방식으로 비교가능해지는 때가, 유가족이 아닌 우리가 유가족과 함께 슬픔에서 벗어나 과거형이 된 사건을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세월호가 더 이상 “사건”이 아닌 역사로 남게 되는 순간일 것이다.

## 참고문헌

- Chakrabarty, Dipesh, 2001, *Provincializing Europe*. Princeton University Press; Espeland, Wendy Nelson, and Mitchell Stevens. 1998. “Commensuration as a Social Proces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July): 313–43.
- Tsing, A L., 2012, “ON NONSCALABILITY: the Living World Is Not Amenable to Precision–Nested Scales” *Common Knowledge* 18(3): 505–24. doi:10.1215/0961754X-1630424.

## ■ 편집부 논평<sup>25)</sup>

### 1. 가학적인 ‘막말’ 그리고 통약가능성

결론부에서 필자는 “막말을 재생산하는 메커니즘”과 근대 자본주의와 관료제를 가능케 하는 핵심기제로서의 통약가능성의 확보를 나란히 소개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글쓰기가 요구된다는 주장을, ‘비교를 위한, 비교의 거부’라는 구절로 축약해 보여주었다.

24)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진상조사위원회는 본디 이러한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닫을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의 난맥상만으로도 진상조사위원회가 본래의 목적을 구현하기 어려움은 다소 명백해 보인다.

25) 이번 기획특집의 다른 글들과 달리 이 글에만 별도의 논평을 붙였다. 곧바로 이어지는 페이지에서 나오겠지만, 기획특집에 실린 글들은 별도의 콜로키엄 토론 내용으로 상호 논평을 대신하였기 때문이다. 이 글의 저자인 박형진의 경우 부득이하게 콜로키엄에 참석할 수 없었던 관계로 편집부에서 따로 논평을 e-메일로 보냈으며, 이에 대한 저자의 답변을 함께 실었다. (편집자 註)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질문은, ‘막말을 재생산하는 메커니즘과 통약가능성의 확보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가?’이다. 그리고 ‘비교를 위한 비교의 거부’에서 첫 번째 비교와 두 번째 비교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필자가 제시하는 조건은 “오롯이 세월호 사건, 사건의 피해자 및 당사자에 대한 것으로 출발해야 한다... 책임 추궁이 이루어졌을 때”였으나 그 차이가 충분히 해명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것은 본문에서 간단히 소개했던 MBC와 CNN이 차이는 아니지 않은가?

필자의 주장대로 더 많은 작업 이후에야 그 모습을 알 수 있을 테지만 필자는 막말의 메커니즘과 통약가능성의 확보 사이에도 여러 층위의 논의가 있으며 비교를 위한 비교의 거부라는 생경한 구분 사이에도 여럿의 담론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2. 사례의 개별/특수/독특성

현대사회의 ‘사건/사고’를 다루게 되는 모든 학자들이 직면한 문제는 “세월호 사건은 후기 산업사회 한국이 경험한 대형재난 중 하나이자 그 재난들과 비교할 수 없는 독특성을 지닌 특별한 사례/사고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이 지점에서 사회의 구조적 측면에(만) 주목하는 사회과학자의 시선과 인류학자의 시선이 갈라지는 듯 보이는데, 글의 도입부에서 제시했던 “사건을 간접적으로만 경험한 인류학자의 위치에 대한 성찰”에 대한 생각을 잠정적 논의의 형태일지라도 제시해주었으면 한다.

## ■■ 저자 답변

박 형 진

(University of Chicago 인류학과 박사과정)

편집부의 질문은 편집부가 나는 방식과는 다르지만 두 개로 나누어 답변할 수 있다: 우선, 막말을 생산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통약가능성의 확보라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그리고 이 글을 통해 필자가 문제로 삼는 입장은, 막말을 특정 개인의 윤리의식의 결여, 혹은 공감능력의 결핍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규범적 시선—즉, 이 사회에서 지켜져야 할 당연한 ‘윤리 규범’이 존재하며 막말을 재생산하는 주체들이 비윤리적이라는 종류의 낙인찍기—이다. 그러한 규범적 시선은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 및 유가족,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스스로의 윤리적, 정치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왜 점차 더 많은 대중들이 ‘비윤리적인’ 막말 혹은 막말이 지향하는 가치에 동감하는지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조금 더 입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예를 들자면, 나는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구호가 한계를 물론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사건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축소되고 잊혀지는 게 아니다. 세월호 사건은 이 사회의 지배적 작동원리—그것을 통약가능성이라 부르든 신자유주의라 부르든 개발주의라 부르든—에 의해 계량가능하고 비교가능한 단위로 축약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잊지 않음’을 강조하는 것은 세월호 사건의 의미를 끊임없이 축소시키고 재단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개인의 윤리적 책임의식에만 호소한다는 점에서 한계적일뿐만 아니라 문제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막말을 통약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근대적/신자유주의적/개발주의적 작동원리가 극적으로 구현되는 장이자 사례로서 접근하고자 했다.

두 번째 질문은 거부해야 할 비교와 지향해야 할 “비교”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제시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이 글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비교”의 거부가 완전한 거부로 끝나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대안적 방식의 비교를 지향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끝내 제목을 ‘비교의 거부’가 아닌 ‘비교를 위한, “비교”의 거부’로 정한 사유는 극히 주관적인 희망 때문이다: 필자는 여전히 세월호 사건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확실히 이루어져 유가족이 슬픔 없이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다른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세월호 사건에 대한 처리를 좋은 전례이자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만큼 한국 사회에서 치열하게 논의되고 잊혀지지 않는 사고는 없었다. 삼풍이, 성수대교가, 대구 지하철 사고가 잊혀지는 데는 훨씬 짧은 시간이 걸렸다. 이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논의가 지역적, 계층적, 세대적으로 상당히 동질적인 유가족 집단—즉, 사고 희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원고 학생의 부모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 이끌어져 왔기 때문이다. 대부분 수동적이고 조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고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및 추모문제를 논의해 온 다른 사고 희생자 유가족과는 달리,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 유가족—특히, 비교적 조직이 용이했던 단원고 피해 학생 유가족—들은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정부의 대책을 문제 삼았으며, ‘추모’의 프레임에 갇혀 있던 대중보다 한 발 앞서 행동에 나섰으며, 현실정치의 장에서 논의의 주체로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편집자가 제시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한데—세월호 사건을 다른 사고 및 사건과 다르게 위치시킬 수 있는 이유이자, 필자가 대안적 비교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굳이 결론과 제목에서 제시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 대안적 비교란, 아주 거칠게 밖에 말할 수 없지만, 사유하는 자가 슬퍼하는 자에게 가하는 폭력적인 계량과 비교가 아닌,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자가 같이 만들어가고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성격의 비교를 의미한다.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달성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은 필자 역시 갖고 있지 못하며, 다만 앞으로 더 생각해보고 싶은 지점이다.

필자는 이 글을 쓰면서 구조적 측면에 주목하는 사회과학자와 구체성에 주목하는 인류학자 사이의 구분을 주장할 의도는 갖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필자는 막말이란 고도로 임의적이며 즉흥적이고 산발적인 실천들을 구조화하는 구조적 차원에 주목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인류학자이자 사회과학자로서의 정체성을 함께 갖고 있다. 다만 굳이 이 문제에 대해 인류학자의 독특한 위치성을 강변하자면, 인류학의 방법론은 사회적 현상을 통약가능한 단위로 환산, 계량하여 분석하는 사회과학의 양적방법론에 가장 덜 의존하고 있으며, 그 지점이 인류학자가 통약가능성의 폭력을 좀 더 비판적인 시선으로 살펴볼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